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제안… 野 “대통령 연임 불가부터”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개편,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여야협의체 등 野와 소통 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적 관심사인 개편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는 야당에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협의할 수 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18(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편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편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은 주로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개편을 통해 분권형으로 개혁하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김민석 대표의 권력구조 개편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앞두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와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

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도 존재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고 “개편의 전제는 간단하다. 이미 몇 번이나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된다”며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그 한 마디가 없으니 개편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정말로 개편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가 ‘연임 불가’ 선언 받아오면, 개편의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쟁점 법안이 다뤄지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적극 소통해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초과 세수로 정부가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야당이 ‘썩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원칙에 저도 100% 동의한다”며 “반약, 정부의 썩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약자나 청년을 위해 더 잘 쓰자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진보든, 보수든, 진지한 문제 제기일 것”이라며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 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김승원 청문회 앞두고 난타전… 신약 로비 의혹 쟁점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승원 “한동훈, 증인 출석하라”
한동훈, ‘청문위원으로 승인’ 요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자신을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 등에 해명하며 연일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하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증인이 아니라 청문위원으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이 김승원 후보자가 내각에 입성하는 것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 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 장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며 “당시 수사가 진행됐던 시기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3년여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결과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애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이나 공무원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며 “그런데, 한 의원은 이번엔 외압으로 저에 대해서 기소 유예가됐다고 한다.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던 시기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과 법무부에서 외압을 받아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자신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에게 공식으로 요청드린다. 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승인해달라”고 했다.

한 의원은 “반약 (청문회)가 열린다면 제가 청문위원으로 (김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임시정부 이래 최초의 전과자 법무부장관이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개혁신당, 비대위 체제로 쇄신안 마련

이번주 전체 당원 찬반투표

개혁신당은 7일 전당대회 개최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주 중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로 지도부가 공백 상태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개혁신당이 비상 상황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보다 파격적인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전당대회도 고려했지만 지난주 시도당 연석회의 및 당내 의견 수

렴을 한 결과, 비대위 구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을 수습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비대위를 통한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고 당내에서 폭넓은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현행 개혁신당 당헌에는 비대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이 없다. 천 권한대행은 “현행 개혁신당 당헌에는 비대위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당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요한 개정사항이므로 전(全) 당원을 대상으로 ‘비대위원회 설치 당헌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찬반투표는 모바일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해 이번주 중 실시된다.

/서예진 기자 syj@

‘13가지 비위 의혹’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경찰 “증거인멸 우려”

경찰이 공천현금 수수, 전직 보좌진 인사상 불이익 요구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의원의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차남 가상 자산거래소 빚셋 취업 청탁 및 영향력 행사 ▲21대 총선 당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 ▲배우자 동작



구의회 법안카드 사적 유용 및 관련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쿠팡에 전직 보좌진 인사상 불이익 요구 ▲강선우 무소속 의원 1억원 공천

현금 수수 묵인 의혹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현금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을 ‘제명’ 징계 처분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9일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탈당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정부 경제정책 국민 61% ‘부정평가’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했다. 특히 경제 분야 중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에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18세 이상 506명에게 ‘현 정부 경제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0%로, 긍·부정 간 격차는 25.1%포인트(p)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및 주거 ▲주식 및 자본시장 ▲물가 및 민생경제 ▲산업 및 경제성장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부정평가가 높았던 건 ‘부동산 및 주거’ (65.7%)였다. 그 뒤로는 주식 및 자본시장(61.7%), 물가 및 민생경제(61.2%), 산업 및 경제성장(59.0%)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4개 분야 모두 부정평가가 60% 안팎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 전월세 가격 안정’이 3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24.5%), 대출 및 가계부채 관리(21.1%), 부동산 세제 개편(19.0%) 순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안정과 거주할 주택을 공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주택 전월세 시장 영향에 대해서 ‘시장 전반에 걸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 (39.3%)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부 지역 및 일부 주택의 전월세 가격만 상승할 것’ (29.3%)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투기 수요를 줄여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7%에 그쳤다.

/서예진 기자